

# 도내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 대폭 감소

### 작년 대비 근로자 수 2배 이상 증가에도 이탈률 0.6% 기록... 전북자치도 체계적 관리·지원 정책 '결실'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에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6,177명으로, 이는 지난해 2,826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근로자의 이탈률은 2022년 32%(전체 1,006명 중 이탈 321명)에서 2023년 7%(187명), 2024년에는 0.6%(31명)로 급격히 감소해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이탈률이 높았던 배경 중 하나는 네발 정부가 계절근로자 후 입국한 자국민의 재출국을 불허함에 따라 고창, 무주 등에서 282명의 네발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집단 이탈했던 부분이 작음했다.

전북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해를 거듭해 지속 감소한 성과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정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결과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있다.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결혼 이민자 비중은 5:5에 해당했으나 점차 늘어 2023년 7:3까지 확대, 올해 들어서는 8:2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시·군별 대표단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제도를 확대했다.

2022년 남원, 완주, 진안, 무주 4개 시·군이 이 제도에 참여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익산, 순창, 고창을 포함한 7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북자치도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근로 및 거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개의 기숙사를 확보해 18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 남원과 완주에 추가로 2개의 기숙사를 확충해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

을 개선하고 있다.

복지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김제와 완주에서는 긴급 의료비를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다문화센터를 통해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 행사를 마련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들은 주로 동계하수작물 재배에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의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근로자들의 이탈률을 더욱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재난안전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박차

### 도, 행안부와 일본 '리스콘도쿄' 박람회서 한국관 공동 운영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손잡고 글로벌 재난안전산업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리스콘도쿄' 해외 박람회에 행정안전부와 함께 한국 전시관을 공동 운영한다고 밝혔다.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리스콘도쿄'는 일본 최대의 종합위험 관리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의 수출상담회, 침수 재난 안전산업 진흥사업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전북 도내 재난 안전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해외 판로 개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에 처음 시행

되는 사업이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4개의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총 30개의 국내 재난 안전기업이 참여해 자사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및 전북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도내 재난 안전기업들의 모집과 선정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행사 이후에도 참여 기업들과 해외 바이어 간 추가 상담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북의 재난 안전산업은 내수시장에서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함께 손을 맞잡고, 세계 재난 안전산업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뽐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위한 공청회 개최

### 주민·기업체·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통해 특구 확대 공감대 형성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전북테크비즈센터 1층 대강당에서 전문가 패널과 주민, 기업체,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변경)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전북테크비즈센터 1층 대강당에서 전문가 패널과 주민, 기업체,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변경)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사업 설명, 특구 변경 및 육성 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서 시작한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대덕·대구·광주·부산·전북에 분포한 5대 광역 연구개발특구와 14개의 거점별 강소 특구로 구성되어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2015년에 도 단위로는 유일하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전주 사업과 촉진 지구와 완주 융·복합 소재 부품 거점지구, 정읍 농생명 융합 거점지구 등 3개 지구 16,089ha(487만 평)이 지정되

어 있으며, 농생명 융합 바이오 산업과 융복합 소재·부품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구 지정 후 9년이 경과하면서 기업 입주율 100% 육

박으로 기업 입주 공간이 부족해 새로운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의 성장 저해 우려 등 특구 성장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추가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또한, 바이오 분야 등 미래 신산업 육성 필요성 대두 등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공간 확대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확대 지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청회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올해 안에 지정 변경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정 변경안은 전주 사업과 촉진 지구에는 기존 1,003만9,000㎡(303만6,797평)에 신규로 장동 연구단지 잔여부지 4필지 2,000㎡(605평)를 추가 지정, 완주 융복합소재부품지구에는 기존 449만9,000㎡(136만947평)에 신규로 완주테크노밸리 2산단 172만㎡(52만300평)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연구시설 부지와 완광대, 전북대 특성화 캠퍼스 및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익산 제3·제4 일반산업단지 등 익산 지역에 총 415만 9,000㎡를 신규로 농생명융합사업화 지구로서 지정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확대 변경 후에는 기존 면적에서 588만1,000㎡(177만9,002평)이 증가한 2,197만㎡(664만5,925평)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호 기자

# 도, 어업인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 108억원 규모 예산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어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어선 보험, 어선원 보험, 어업인 안전 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 총 4개의 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총 108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선 보험은 1,619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57억4,900만원을 지원해 어선의 침몰·좌초·충돌·화재 등 해양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보장한다.

또한, 2,921명의 어선원을 대상으로

44억7,800만원을 지원하는 어선원 보험은 어업인의 안전을 보장하며,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어업인 안전 보험은 3억원을 투입해 어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7여개에 대해 2억 8,100만원을 지원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포함돼 있다.

/이만호 기자

# “도지사 인증상품 판로개척 보조금사업 감사 착수해야” | 이병도 도의원, 도정질문서

전북특별자치도 이병도 의원(전주 1)은 제4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민의 형세를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상품 판로개척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촉구했다.

(사)전북특별자치도 인증상품 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하는 상품의 판매시장 개척지원과 매출 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4억3,000만 원, 수도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관 운영사업에 1억2,000만 원씩 지난 5년간 해도 2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한 의원은 이날 “재난의 빈번한 발생과 피해 지역의 광역화에 따라 현장

이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매년 5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세부항목, 성과 목표도 없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왔고, 정산보고서는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라고 말하며, “정산서 내용을 살펴보니 곳곳에서 보조금 사용 지침을 위반한 내용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부당한 보조금 사용

분에 대해서는 환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3년 협의회에서 제출한 정산서에서는 상품관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6,500만원을 지출하는 단위 사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보조금 수령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만 첨부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용 내용은 없었다. 또한, 첨부된 계약서 내용은 보조금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협의회에 매년 1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초과분은 보조금 수령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약정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협의회 직원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수년 동안 전북자치도에 반납하지 않은 채 협의회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절차상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도민의 형세를 환수하는 한편, 관련이 없는 도지사 인증상품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안에 미흡한 행정처리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부당한 보조금 운영, 협의회 자산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만호 기자

# “재난 피해·탄소 중립·초저출생 적극 대응을” | 한정수 도의원, 도정질문서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이 지난 8일 제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재난 피해에 대한 신속지원 대응체계 구축, 탄소중립 선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 초저출생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등이 요구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이날 “재난의 빈번한 발생과 피해 지역의 광역화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방안 모색과 동시에 재난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특례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연계된 업무를 기획, 조정, 점검할 수 있는 탄소중립 추진단 신설이 감감무소식이고,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 평가·환류하는 제도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추진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또 “2010년 1만 6천 명의 전북특별자치도 출생아수가 2023년

6,600명으로 나타나 9,500명이 감소(-59%)했고, 2016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나타나 초저출생에 직면했다”며, “도민들이 참여하는 초저출생 범도민위원회 출범을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도민의 편의 증진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초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 “올 수산물 수입 78개국 중 위생약정국은 고작 12개국”

### 민주 윤준병 의원



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스페인 정부의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 6월 스페인과의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입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은 12개국으로 증가했으나,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수산물 전체 국가 대비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단 15.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입 수산물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산물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국 중에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1,818억원·4만71톤)·인도(1,527억원·190만5,859톤)·일본(1,423억원·2만5,40톤) 등도 포함돼 있어 수입수산물 위생에 공백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위생약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국가별 수입 수산물의 부적합 판정내역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수산물은 119건·1,175톤으로 그 규모만 75억 2,550만원에 달했다. 특히,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수입 수산물 부적합 판정은 같은 기간 62건(810톤)으로 전체 부적합 판정건수의 과반이 넘는 52.1%에 해당했고, 수산물 수입약정 미체결국 중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가는 일본(22건, 314톤)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입한 전체 국가 중 수산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 안전 및 위생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에콰도르·칠레·노르웨이·필리핀·페루·아르헨티나·스페인 등 전체의 15.4%(23년 대비 13.6%)에 불과한 12개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올 6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12개국과 식품안전 및 위생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약정 체결에 따라 체결국이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업체에 한해 수산물을 수입하고, 수입 시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또한 약정 체결 후 수입된 수산물의

일본은 올해에만 16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가리비·눈다랑어·참다랑어 등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 감염(8건), 큰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독(7건), 황다랑어에서 살모넬라(1건) 등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29건, 275톤)을 받았고, 다음으로 일본 22건(314톤), 홍콩 15건(321톤) 순으로 나타났다.

/정음=김대환 기자

# 도, ‘미래를 여는 디지털’ 세미나 성료

### 생성형 인공지능·XR·IoT·AI 정보보안 주제

###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분야 경쟁력 강화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를 여는 디지털: 생성형 인공지능, XR, IoT, AI, 정보보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정보보안 등 정보통신(ICT)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 도내외 기업으로 도민의 편의 증진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초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신·XIA(XR, IoT, AI) 강연을 시작으로 더플랜경영연구소 김정곤 대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법 및 사례’, 부산대학교 최만용 교수의 ‘생활 속 지켜야 할 정보보호 수칙’까지 총 세 가지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XIA, 생성형 AI, 정보보안 등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기업과 도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만호 기자